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파견요청 촉구안

의안 번호	1279
----------	------

발의연월일 : 2016. 10.

발 의 자 : 김경환 외 8명

찬 성 자 : 김경환 외 8명

### 1. 주문

-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우리구에서 재난원인조사단파견 요청 건의에 대하여 소송의 우려가 있어 파견할 수 없다고 하나 앞으로의 사항을 예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봄.
- 우리 구 태화시장, 우정시장, 반구1동 배수지가동중지로 인한 침수, 옥교동 옥교나들문 폐쇄지연에 따른 침수는 기상대 관측이후 최대의 집중호우가 원인일 수 있으나 급변한 주변 환경적 변화에 따른 인재라고도 볼 수 있어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을 파견하여 울산광역시 2007년 치수계획, 2011년 치수계획을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관리소홀 미미에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2. 제안 이유

- 우리 구는 금년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타구와 달리 공공시설부분 피해가 적고 2군데의 대표전통 시장, 반구1동의 경우 개발로 인한 저지대 발생과 배수장 가동중단, 옥교

동 나들문 폐쇄지연 등으로 인한 침수로 민간부분 피해가 극심해 망연 자실해 있는 상인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이에 주민들은 침수의 원인이 집중호우의 탓도 있으나 급변한 주변 환경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피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관계분야 전문가 구성된 중앙합동재난원인 조사단을 조속히 편성하여 우리 구에 보내 주시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써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해 줄 것을 촉구함.

### 3. 기타

가. 건의문 : 불임

나. 건의문 보낼곳

- 국민안전처(장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파견요청 촉구안

우리 울산 중구는 금년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침수되고 수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 또한 있었습니다.

초기 피해 집계액만 하더라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500억원을 넘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가의 피해가 극심해 망연자실해 있는 상인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무엇보다 침수의 원인이 자연 재해 원인인 집중호우보다는 급변하는 주변 환경변화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주변 환경은 인위적으로 개발되어 가는데 그에 따른 기존 환경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지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중구의회는 귀처 사고조사담당관-1695(2016.10.26)호에서 정부합동원인조사단 운영규정 제3조를 잘못 판단하여 답변을 보낸 것으로 사료된 바 따라서 조속히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파견하여 재난원인규명과 향후 대책마련으로 잘못된 치수계획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신력 있는 결과물이 도출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 중구 혁신 도시 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역 재난 상황에 앞장서서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정부합동재난원인 조사단을 조속히 편성 · 파견하여 철저한 수해원인분석, 피해상황 및 현장조사, 재난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 분석 · 평가를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 1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 <관련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1. 국민안전처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④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사고원인 분석 내용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운영 규정

제3조(재난원인조사 대상) 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된 재난 및 사고
2. 재난관리 주관 또는 책임기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재난 및 사고
3.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 법률에서 재난 및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2.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③ 법 제3조제1호 가 목의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